

檢 “론스타 경영진 13일까지 출석하라”

소환 불응땐 美에 범죄인 인도 요청

외환은행 헬갯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매각 당시 허위 감사설을 유포해 소액주주들에게 22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론스타 경영진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제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9일 “미국에 있는 론스타 본사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 이사에게 13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해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쇼트 부회장이 소환 요청에 불응할 경우 이르던 다음주 중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3번째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뒤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영장 3번째 청구...정공법 선회

제 기획관은 “이번 사건은 누가, 왜,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것인지 소명했다고 생각한다. 소환에 불응하며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대외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이 최후통첩이다. 입국해 정정당당하게 조사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계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국수주의적인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거나 여론의 눈치를 보



9일 서울 종로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앞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들이 론스타의 법률자문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압수수색을 요구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며 차별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밟을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론스타가 은행 매입 과정에서 하중선(당시 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를 통해 경제·금융부처를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을 가능성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하중선·변양호씨도 소환조사

제 기획관은 “하중선씨와 구속 수감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며 이들의 공모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 대표는 모 법무법인 고문변호사로 일했던 2003년 론스타 측의 법률자문을 맡으면서 20억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 대표는 모 법무법인 고문변호사로 일했던 2003년 론스타 측의 법률자문을 맡으면서 20억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의 법률자문회사인 김앤장 고문이었던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도 이달 말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변 전 국장 등에게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부당 청탁을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론스타 경영진의 영장기각을 둘러싼 법원·검찰의 갈등과 관련, “수사를 보완해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다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기각 사유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번 사건을 놓고 검찰과 법원이 마치 갈등을 빚는 것처럼 비치는 게 문제”라며 “(이번 사건은) 상호간의 견해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반성없는 與 신당론



임동욱

서울지사 취재팀장

열린우리당이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정계계편 논의를 정기국회 이후로 미루자고 합의했으나 여당 내부 통합신당과 의원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분주하다. 그동안 소규모 모임이 가졌던 통합신당과 의원들은 김한길 원내대표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 대표연설에서 ‘새 아침론’을 펴며 통합신당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대기 회동을 갖고 있다.

우선 지난 8일 당내 대표적 통합론자인 염동연 의원은 통합신당론을 지지하는 23명의 의원들과 오찬 모임을 주도한 이후 “이제 당내에서는 통합신당론이 대세론으로 가는 것 같다”는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7일에는 광주와 전남지역 여당 의원들과 충청권 의원들이 각기 모임을 가졌다. 말은 아졌지만 ‘통합신당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출신의원들과 수도권 남부지역 의원들도 다음주 모임을 갖고 통합신당의 방법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당 내 통합신당과 의원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현재의 열린우리당으로는 정권재창출이 어려운 만큼 민주세력 대통합을 통해 정권을 창출하자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을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방법만이 남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통합신당파의 주장은 통렬한 자기 반성과 사과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통합파의 정계계편론은 신당을 창당함으로써 국정운영 실패 등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고 소위 ‘신장개입 효과’를 극대화, 차기 대선과 총선에 임하겠다는 정치공학적인 구상이라는 따가운 논총을 받고 있다.

‘여권발 통합신당론’에 대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썩렁한 것은 이같은 점을 반영한다. 특히, 그동안 별다른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해 입지가 흔들렸던 광주·전남지역 여당 의원들이 통합신당에 적극적인 점에 대해 지역민들의 눈길도 뜨겁다.

통합신당 창당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라는 입지를 활용, 지역구만 확실히 확보한다면 한나라당과의 양당 구도하에서 치러지는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18대 총선에서의 안정적인 당선이 가능하다는 정치적 이해 타산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생존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은 본능이다. 이를 탓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와 예의는 있어야 한다.

여당 의원으로서 국정 운영의 실패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철저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는 정권재창출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정치적 활로를 모색한다는 의구심이 남아있는 한 여당발 통합신당론은 오히려 민주세력의 정권재창출을 더욱 멀어지게 할 것이다.

/tuim@kwangju.co.kr

해외도피 재산 환수 길 열려

법무부 '부패재산 몰수 특례법' 입법

뇌물·횡령·선거법 위반 등 부패 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자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정된다.

법무부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입법 계획을 공개했다. 이 법은 우리 정부가 2003년 서명한 유엔 반부패 협약의 이행 입법 성격을 띠고 있다.

유엔 반부패협약은 2003년 10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으며 비준국이 30개국을 넘긴 작년 12월 발효됐다.

지금까지 부패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우리 정부가 환수하려면 양국간 조약을 전제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양국 국내법 절차를 충족하는 사안에 한해서만 협조가 가능했다. 그나마 해외도피 재산이 이런 절차에 따라 환수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 법이 제정되면 유엔 반부패 협약이 비준된 73개국 사이에는 부패 사범이 빼돌린 부동산이나 외환 등에 대해 몰수·추징 업무를 공조할 수 있는 협력 체계가 마련된다. /연합뉴스

‘일심회’ 사건 공은 이제 검찰로 보강수사 후 내달 9일께 기소

‘간첩’ 입증 여부 주목

국가정보원이 20일 가까이 수사해온 친북 비밀조직 ‘일심회’의 북한 공작원 접촉 사건을 이번 주말을 전후해 검찰에 넘기기로 함에 따라 검찰이 남은 의혹 수사와 기소를 맡게 됐다.

9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달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한 장민준(44,미국명 마이클 장)씨와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43)씨, 학원사업자 손정목(42)씨, 또 26일 연행된 민주당 사무부총장 최기영(40)씨와 장씨의 회사 직원 이진강(43)씨의 신병과 수사 기록을 10일과 13일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무엇을 수사하나=국정원은 장씨가 밀입북해 노동당에 가입한 뒤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고정간첩’으로 암약하면서 일심회를 결성해 나머지 구속자들을 조직원으로 포섭,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 접촉을 주선하고 각종 정보 수집 임무를 맡겼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해왔다.

검찰은 국정원이 수집한 자료나 단서, 정황 등을 토

대로 장씨 등의 범죄 혐의를 구체화 하고 진위 논란을 빚어온 일심회의 실제 규명과 함께 조직원들로 지목된 이들의 행적 등을 밝히는 데 수사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도 쉽지 않을 듯=구속자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일부는 단식 중이어서 검찰로서도 이들의 ‘입’을 통해 사건 전모를 파헤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씨는 혐의를 일부 시인한다 변호인을 면담한 뒤 태도를 바꿨고 나머지 변호인 등을 통해 사법, 또는 휴가차 중국을 방문했으며 ‘일심회’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과거엔 ‘간첩’ 관련 사건의 경우 자백, 심증, 상황논리 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증이 없으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을 정도로 수사 환경이 확 변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장의 ‘간첩단’ 발언과 피의사실 공표,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관타나모 수용소 이첩’ 위협 등도 법정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버리고 있다. /연합뉴스

‘北 위폐’ 진위 왜 숨기나

정부 1년 가까이 침묵 일관·의혹 증폭

정부가 적어도 작년 12월부터 국내에서 발견된 미국 달러와 위조지폐의 북한산 여부를 분석해 왔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일부는 9일 “정부가 북한 위폐 문제를 조직적으로 은폐, 왜곡하려 했다”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주장에 대한 보도참고자료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는 6차회담이 북한 위폐 문제로 중단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초 실무협의를 가졌으며 정부가 입수한 위폐가 북한에서 제조됐는지 분석하고 증거가 기초해 정확하게 판단해 줄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나왔지만 정부가 작년 말부터 미 달러 위폐의 북한산 여부를 삼도있게 분석해 왔다는 사실도 보여줬다.

하지만 정부는 분석에 착수한 지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북한산 위폐의 확인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미 분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입수했다는 위폐는 2004년 4월 남대문에서 적발된 위폐(미화 100달러 짜리 위폐 1천400장)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위폐에 대해 미국에 진위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해 이미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그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경동 심야 전기보일러 특별보급
눈이 올 때 보일러를 설치하기 보일러공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
경동보일러
010-9469-9373
(062)673-4981

에어컨+난방기+공기정화를 1대로
신탈
010-955-4222
080-701-7117